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0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동형 제1회 1번 '다'>
- ②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6조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 ③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범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동형 제3회 1번 ②>
- ④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동형 제3회 ④>

[정답] ④

[해설]

①②③ 옳음.

- ④ 틀림.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가 단행되면서 다른 행정역역과 무관한 독립적인 경찰작용을 보안경찰, 다른 행정역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명명하였다.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질서와 안전은 위생은 보안경찰 위생은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에 속하는 작용으로서 해당지문은 옳지 않다.

■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한 법과 판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794년)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그의 개개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10조 2항 17호) ⇨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한정
죄와 형벌법전 (경죄처벌법전) (1795년)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안전을 보호함(소극 목적에 한정)을 임무로 한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 행정경찰이라는 용어가 유래됨
크로이쯔베르크판결 (1882년)	독일의 크로이쯔베르크 언덕의 전승기념비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베를린경찰청장의 명령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므로 무효라고 하여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 ⇨ 경찰작용의 목적축소와 관련
지방자치법전 (1884년)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931년)	“경찰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 ⇨ 경찰의 직무범위는 소극 목적에 한정한다는 경찰의 개념이 확립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02.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 않는다. <예상문제 제1회 5번 ③>
- ②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동형 제2회 1번 ㉠>
-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이다.

[정답] ③

[해설]

- ①②④ 옳음.
- ③ 틀림. 어느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을 포괄하거나 더 넓은 개념이 아니라 형식적의미의 경찰 중에서 실질적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의미의 경찰 중에서 형식적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상문제 제1회 32번 ①>
- ② 공직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예상문제 제1회 32번 ①②>
- ③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예상문제 제1회 31번 ②>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 ② 틀림.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단서)
- ③ 옳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③)
- ④ 옳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④)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04. 갑오개혁 및 광무개혁 당시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 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년)과 「위경죄즉결례」(1885년)를 혼합하여 만든 「행정경찰장정」에서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되었다.<예상문제 제1회 38번 ㉠>
- 나. 광무개혁 당시인 1900년에는 중앙관청으로서 경부(警部)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 사무를 통할하였고, 이를 지휘하는 경부감독소를 두었다.<예상문제 제1회 38번 ㉡>
- 다. 1895년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정비하였고, 1896년 「지방경찰규칙」을 제정하여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라.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장으로 경무관을 둠), 한성부 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 마. 1900년 경부(警部) 신설 이후 잦은 대신 교체 등으로 문제가 많아 경무청이 경부의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가, 다, 마. 옳음.

나. 틀림. 경무감독소는 궁내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두고 이를 지휘하였다.

라. 틀림.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으며 한성부 5부 관내에 경찰지서를 두고 지서장으로는 경무관을 두었다..

5.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 가.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 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 나.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 다.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 라.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던 바,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기구독립이 조직의 숙원이었다.
- 마.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가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다.
- 바. 1969년 1월 7일 「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서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바. 틀림.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서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가, 나, 다, 라, 마, 옳음.

6.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 ②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상문제 제1회 72번 ③ / 동형 제2회 ①>
- ③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④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예상문제 제1회 72번 ① / 동형 제2회 ③>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주관쟁의의 방법에 따른다.

②③④ 옳음.

훈령의 경합	① 하급행정기관은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는 경우 주관상급관청 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② 주관상급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관청 (최상급관청X)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③ 주관상급관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관쟁의 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

7.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가. 영리업무종사금지 의무	나.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
다. 품위유지 의무	라. 법령준수의 의무
마. 제복착용 의무	바. 집단행위금지 의무
사. 비밀엄수 의무	아.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의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①

[해설]

나, 마. 옳음.

가. 틀림. 국가 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

다. 틀림.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의 의무

라. 틀림.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

바. 틀림.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의 의무

사. 틀림.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의 의무

아. 틀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직무상의 의무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경찰공무원의 의무

의무	국가 공무원법	선서의무(제55조), 성실의무(제56조)	일반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제65조) 비밀엄수 의무(제60조) 품위유지 의무(제63조) 청렴의무(제61조) 영예 등의 제한(제62조) 집단행위 금지의무(제66조)	신분상 의무
	경찰 공무원법	법령준수의무(제56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무전념 의무(제58조, 제64조)★ 직장이탈금지(제58조) 영리업무종사금지(제64조) 검직금지(제64조)	직무상 의무
		제복착용의무(제20조1항), 거짓보고 및 통보금지 의무(제18조 제1항), 지휘권남용금지 의무(제19조), ☆ 직무유기금지 의무(제19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제9조)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제10조)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제8조)☆	신분상 의무
	공직자 윤리법	재산등록·공개의무(제3조, 제10조)	

8.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私法人)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예상문제 제2회 3번 ①>
- ② 경찰이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③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 ④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위책임이다. <예상문제 제2회 3번 ③>

[정답] ④

[해설]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④ 틀림. 자기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책임을 지는 경우 이는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이다.

①②③ 옳음.

■ 책임의 종류

행위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한 경찰위해에 지는 책임. ➡ 자기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책임을 지는 경우 이는 대위책임이 아니라 <u>자기책임</u> 이다. 예) 교통사고를 낸 자의 구호책임, 공원에서 유아에게 소변을 보게 한 보호자의 책임.
상태책임	물건이나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당해 물건의 상태나 동물의 행위로부터 야기된 경찰상의 위해에 대해서 지는 책임. 예) 무너진 축대의 소유자, 오염된 토양의 소유자
복합적 책임	하나의 위해가 다수인의 행위나 다수의 물건의 상태에 의해 발생 했거나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중복에 기인한 경우. 예) 주유소 운영자와 토지의 소유자

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 경간]

- 가.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예상문제 제2회 32번 ④ / 동형 제4회 13번 'ㄴ'>
- 나.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예상문제 제2회 24번 '가'>
- 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예상문제 제2회 24번 '가'>
- 마.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구호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구호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예상문제 제2회 31번 ③>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가.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④)

나. 틀림.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⑤)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⑥)

다. 옳음. (동법 제4조 ③)

라. 옳음. (동법 제4조 ⑦)

마. 옳음. (동법 제4조 ①)

1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행정기관 간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가.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동형 제1회 8번 ② 해설>

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동형 제1회 8번 ③>

라.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동형 제1회 8번 ③>

마.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가.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나. 틀림.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한다. (동규정 제3조)

다. 틀림.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동규정 제6조)

라. 옳음. (동규정 제7조)

마. 옳음. (동규정 제8조 ①)

바. 옳음. (동규정 제9조 ①)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11.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 가.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동형 제2회 27번 ③>
- 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 다.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 당시의 해당물건의 교환 가액으로 보상한다.
- 라.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 마.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예상문제 제2회 20번 ①>
- 바.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 가.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①)
- 나.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① 제1호)
- 다. 틀림.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 가액으로 보상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① 제2호)
- 라.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① 제3호)
- 마.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②)
- 바.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⑤)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예상문제 제2회 25번 ①>
- ② “경찰장구”란 무기,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예상문제 제2회 25번 ②>
- ③ 경찰청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한다.<예상문제 제2회 25번 ③>

- ④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①)
② 틀림. “**경찰장비**”란 무기,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②)
③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⑤)
④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③)

진도별 예상문제

25.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검사의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해설]

■ 안전검사와 안전성검사 구별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u>경찰장비 자체의 안전검사를 정해진 검사빈도에따라 실시하는 것</u>
안전성검사	새로 도입하려는 장비(이하 이 조에서 “신규 도입 장비”라 한다)가 <u>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u>

- ① 틀림.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①)
② 옳음.(동법 제10조②)
③ 틀림.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동법 제10조⑤)
④ 틀림.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동법 제10조⑥)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13.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으로 구분할 때, 전통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경간]

- ① 대집행 ② 집행벌 ③ 과징금 ④ 강제징수

[정답] ③

[해설]

과징금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강제	- 강제집행 : 대집행,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 즉시강제
	경찰벌	- 경찰형벌 - 경찰질서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금전상 제재(과징금·가산금) - 명단공개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취업제한 - 공급거부 - 관허사업의 제한 - 국외여행의 제한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고,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 ②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동형 제4회 21번 ④>
- ③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동형 제4회 21번 ③>
- ④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동형 제4회 21번 ①>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고,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④ 제3호)
- ②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 ①)
- ③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④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동형모의고사 총5회 중 4회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②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19' 대비 실무종합부터 추가된 문제임. (20년 대비 실종 p.282 9번)

- ① 옳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 ② 옳다. (동법률 제58조)
- ③ 옳다. (동법률 제59조③)
- ④ 틀림.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동법률 제60조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의 신고 (제55조)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6조)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7조)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19. 4. 16.>[시행일 : 2019. 10. 17.]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7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16.][시행일 : 2019. 10. 17.]
신고의 방법 (제58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제58조) <개정 2019. 4. 16.>[시행일 : 2019. 10. 17.]
신고의 처리 (제59조)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제59조 ③)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제59조 ④)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 장교 6. 국회의원 <개정 2019. 4. 16.>[시행일 : 2019. 10. 17.]
조사결과의 처리 (제60조)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5.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의 관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 가.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출부에 관련사항을 기록·유지한다.
- 나.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 다.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라.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1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동형 제4회 19번 ①>
- 마.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바. 서약서철, 비밀접수증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③

[해설] 보안업무규정과 동 시행규칙의 구분.

- 가. 옳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 ①)
- 나. 틀림. 보안업무규정의 내용.(보안업무규정 제22조 ②)
- 다. 옳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 ③)
- 라. 틀림. 보안업무규정의 내용.(보안업무규정 제22조 ①)
- 마. 옳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 ⑤)
- 바. 옳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0조 ①)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경간]

- 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동형 제1회 19번 ① / 동형 제3회 19번 ④>
- 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라.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마. 정정보도의 청구가 공익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바.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비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가, 나, 마 ② 다, 마, 바 ③ 라, 바 ④ 마, 바

[정답] ④

[해설]

- 가. 옳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②)
- 나. 옳음. (동법 제15조 ④ 제1호)
- 다. 옳음. (동법 제15조 ④ 제2호)
- 라. 옳음. (동법 제15조 ④ 제3호)
- 마. 틀림.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④ 제4호)
- 바. 틀림.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④ 제5호)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17. 경찰통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0'경간] <예상문제 제2회 67번, 68번>

- ① 행정절차법,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 ② 경찰청의 감사관, 지방경찰청의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는 협의의 행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과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권은 행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 ② 틀림. 경찰청의 감사관, 지방경찰청의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③ 틀림.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는 광의의 행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④ 옳음.

1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원리와 그에 대한 적용을 연결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예상문제 제3회 07번>

- ① 자연적 감시 - 조정·가시권의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
-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출입구의 최소화,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 ③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울타리의 설치
- ④ 활동의 활성화 -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정답] ②

[해설]

- ② 틀림.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는 활동성의 활성화에 관련한 적용 예에 해당한다.
- ①③④ 옳음.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 예 조명·조정·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이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 시켜 범죄를 예방. 예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영역성의 강화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 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 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예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성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 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예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유지관리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 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말함 예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경비업의 종류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0.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 가.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각종 현황·통계·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 나.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동형 제1회 22번 ③>
- 다.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로, 관내 중요 사건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동형 제1회 22번 ④>
- 라.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동형 제1회 22번 ②>
- 마. '지역경찰관서'라 함은 「경찰법」 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동형 제1회 22번 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해설]

- 가. 틀림.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전파 업무는 상황근무의 업무에 해당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① 제4호)
- 나. 틀림.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고(동 규칙 제6조 ②)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동 규칙 제6조 ③)
- 다. 옳음. (동 규칙 제5조 ③, 제8조 ②)
- 라. 틀림.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동규칙 제4조 ①)
- 마. 틀림. "지역경찰관서"란 「경찰법」 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동 규칙 제2조 제1호)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동형모의고사 제1회

22. 경찰청훈령인「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역경찰관서”라 함은 「경찰법」 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 ②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 ③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고, 순찰팀의 수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 ④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지역경찰관서장의직무로,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정답] ④

[해설] 옳은 것은 ④이다.

- ① 틀림. “지역경찰관서”라 함은 「경찰법」 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파출소를 말한다.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 ② 틀림. 지방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동규칙 제4조 ①)
- ③ 틀림.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경찰서장이 결정하고,(동규칙 제6조 ③) 순찰팀의 수는 지방청장이 결정한다.(동규칙 제6조 ②)
- ④ 옳음.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지역경찰관서장의직무로,(동규칙 제5조 ③ 제4호)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동규칙 제8조 ② 제3호)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20'경간]

-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데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자
-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정답] ②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강요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②는 미수일 경우에도 처벌되지만 ①③④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22.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20'경간]

- 가. 풍속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형 제3회 20번 ②>
- 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주점영업을 하였다면,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
- 라.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 마.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소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바.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경우,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 가. 틀림. 풍속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도4545)
- 나. 옳음. (대법원 97도1873)
- 다. 틀림.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주점영업을 하였다면,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구 식품위생법(2006. 12. 28. 법률 제8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도2160)
- 라. 옳음. (대법원 99도2151)
- 마. 틀림.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도3801)
- 바. 옳음. (대법원 2008도3975)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동형 제1회 28번 ④>

- | | | |
|-----------|----------|--------------|
| 가. 공갈죄 | 나. 퇴거불응죄 | 다. 주거·신체 수색죄 |
| 라. 중손괴죄 | 마. 재물손괴죄 | 바. 중감금죄 |
| 사. 약취·유인죄 | 아. 특수감금죄 | 자. 아동학사죄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 나, 라, 사. -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가, 다, 마, 바. -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

- 가.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 다.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경간]

-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동형 제3회 25번 ④ / 제4회 28번 ②>
-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동형 제4회 28번 ③>
- ④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동형 제2회 22번 ④ / 제4회 28번 ③>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②

[해설]

- ① 틀림.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①)
- ② 옳음. (동법 제26조 ②)
- ③ 틀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⑥)
- ④ 틀림.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1조 ③)

25. 사이버범죄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예상문제 제3회 사이버범죄>

- ①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등은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해당한다.
- ②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도 '컴퓨터 파괴행위'에 해당한다.
- ③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중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을 '프로그램 조작'이라 한다.
- ④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중 일부 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산출조작'이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①②③ 옳음.
- ④ 틀림.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중 일부 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하도록 하는 방법을 '투입조작'이라 한다.

■ 사이버범죄의 유형

분류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장애(성능저하, 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매개한 경우 및 매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예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컴퓨터 시스템을 전통적인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범죄 (인터넷 사용자간의 범죄) 예 인터넷 사기,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 개인 위치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
	불법 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콘텐츠'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예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침해 유형	컴퓨터 파괴행위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 - 프로그램 파괴, 자료접근 방해행위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투입조작	일부 은닉 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 을 초래하도록 하는 것
		프로그램조작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 을 작성 투입하는 것
		console 조작	콘솔을 부당하게 조작하면 프로그램의 지시나 처리될 기억정보를 변경시키 는 것
		산출물 조작	정당하게 처리 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

26.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 가.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숙박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류지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하여야 한다.<동형 제2회 25번 ㉠>
- 나.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한 후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예상문제 제3회 49번 ㉡>
- 다.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비상호송이라 한다.
- 라.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호송이 항상 금지된다.
- 바. 금전·유가증권은 호송관에게 탁송하고, 물품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함이 원칙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④

[해설]

- 가.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6조 ①)
- 나. 틀림.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49조 ①)
- 다. 틀림. "이감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동 규칙 제46조 제4호)
- 라. 틀림.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동 규칙 제70조 ②)
- 마. 틀림.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다만, 기차, 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 규칙 제54조)
- 바. 틀림. 원칙적으로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하고(동규칙 제53조 제1호),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한다.(동규칙 제53조 제3호)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46조 정의)

이감호송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
왕복호송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
집단호송	한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것
비상호송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

27. 재난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경찰 재난관리 규칙」상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동형 제5회 23번 ①>
- ② 재난지역 주민대피 지원은 생활안전기능에서 수행한다.
-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예상문제 제4회 18번 현장지휘본부의 구성>
-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예상문제 제4회 16번 ①>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②)
- ② 옳음. (경찰 재난관리 규칙 ‘별표 2’)
- ③ 틀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④ 옳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28. 경찰의 대테러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한국의 대테러 부대인 KNP868은 대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983년 창설된 경찰특수부대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부대이다.
- ② 외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등이 있다.
- ③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B급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상문제 제4회 25번>
- ④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동형 제5회 22번 ①>

[정답] ③

[해설]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①② 옳음.

③ 틀림.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축물등 전체에 대해 A급은 분기 1회 이상, B급, C급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2조 ①)

④ 옳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 각국의 테러조직

SAS(영국)	① 제2차 세계대전 중 북아프리카 전선의 적 후방에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 1941년에 창설, 제2차대전 후에는 테러 진압 부대로 운영되었음. ② 세계 최초의 전문화된 특수부대로서, 오늘날 여러 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특수부대 모델이 됨.
SWAT(미국)	미국 각 주립 경찰서 내에 조직된 특공팀으로서 1967년에 창설되었다.
GSG-9(독일)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 테러사건 발생 후 대테러부대의 필요성에 따라 창설되었다.
GIGN(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점거사건 직후인 1973년에 창설되었다.

29.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예상문제 제4회 9번>

- 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세기간 중 근접배치 한다.
- 나. 대통령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의 다음날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한다.
- 다. 제1선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한다.<예상문제 제4회 9번 ②>
- 라. 개표소 경비 제2선(울타리 내곽)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고,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한다.
- 마. 개표소 내부의 사전 안전검측 및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해설]

- 가. 틀림. 후보자가 신변경호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경호경험이 있는 직원을 대기시켜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 나. 틀림. 대통령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시 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한다.
- 다. 틀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83조 ③)
- 라. 옳음.
- 마. 틀림. 개표소 내부의 사전 안전검측 및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30.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평시 및 병중사태 발생 시 경찰책임지역 내에서는 지방경찰청장 책임 하에 경찰·군·예비군·관민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지휘·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 ②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중사태에 해당한다.
- ③ 상황발생시 상황보고·통보 및 하달은 1순위로 직접 행동을 취할 기관 및 부대, 2순위로 지휘계통에 보고, 3순위로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및 부대, 4순위로 기타 필요한 기관 및 부대 순이다.
- ④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발령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통합방위법 제2조 제8호)
- ③ 틀림. 상황발생시 상황보고·통보 및 하달은 1순위로 직접 행동을 취할 기관 및 부대, 2순위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및 부대, 3순위 지휘계통에 보고, 4순위로 기타 필요한 기관 및 부대 순이다.
- ④ 옳음.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령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3조 ①)

31.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와 결격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 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자 - 위반한 날부터 3년<예상문제 제4회 58번 ㉠>
- 나.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자 - 취소된 날부터 2년<예상문제 제4회 58번 ㉡>
- 다. 과로상태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 - 취소된 날부터 5년
- 라.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2년<동형 제2회 30번 ㉢>
- 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1년<동형 제2회 30번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마’ 1개가 옳지 않다.

마. 틀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제한이 없다. -아래 표 참고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응시제한 기간

5년 제한	① 무면허 운전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② 음주운전 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과로, 질병, 약물) 또는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③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취소된 날 부터
4년 제한	무면허 운전등의 금지, 음주운전 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과로, 질병, 약물) 또는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위반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된 날 부터
3년 제한	① 음주운전 금지위반 또는 음주측정의무를 위반(무면허 운전등의 금지규정을 함께 위반한 경우를 포함 : 위반한 날부터) 하여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취소된 날부터 ②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2년 제한	① 무면허운전 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취소된 날 부터 ②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무면허 운전등의 금지규정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 위반한 날 부터) 또는 : 취소된 날부터 ③ 공동위험행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무면허 운전등의 금지규정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 위반한 날 부터)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④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위반하여(무면허 운전등의 금지규정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 위반한 날부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취소된 날부터 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⑥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취소된 날부터 ⑦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 제한	① 5년~ 2년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② 무면허 운전등의 금지 규정 또는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제한기간
6개월 제한	① 5년~ 2년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②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제한 없음	①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②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기타	①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②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특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경간]

<예상문제 제4회 38번>

- ①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②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③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④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② 제1호)
- ② 틀림.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처벌특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표 참고
- ③ 옳음. (동 법 제3조 ② 제4호)
- ④ 옳음. (동 법 제3조 ② 제8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과실 12개항 (제3조 제2항 각호)	① 신호, 지시위반 사고 ② 중앙선침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③ 제한속도 초과 사고(20km/h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사고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⑦ 무면허운전 중 사고 ⑧ 음주 약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⑨ 보도침범, 통행방법 위반사고 ⑩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사고 ⑫ 적재화물추락사고 ➡ 암기: 음주 무면허 신 중 철길 앞 횡단 보도 어린이 승객 화물 제한-20km/h (음주 무면허는 신중해야 하고 철길 앞 어린이 승객의 화물은 20km/h로 제한한다.)
--------------------------	--

33.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로 전제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간]

- 가.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 나.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음주측정용 불대는 1인 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상문제 제4회 59번 ②>
- 라.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 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바.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예상문제 제4회 63번 ④>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①

[해설]

- 가. 옳음.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 나. 옳음.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을 자동차 등과 일부 건설기계로 한정하고 있다. 경운기나 트랙터의 경우 농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틀림. 음주측정용 불대는 1회 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 ③)
- 라. 틀림.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이 가능하나,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한정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 마. 옳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2.취소처분개별기준 일련번호 2)
- 바. 옳음. (대법원 2000도6026)

34.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20'경간]

- 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앞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진로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③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행위를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예상문제 제4회 64번 ③>
- ④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대법원 92도2077)
- ② 옳음. (대법원 89도777)
- ③ 틀림.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행위를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11도9821)
- ④ 옳음. (대법원 2011도7725)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있다. <예상문제 제5회 24번 ㉔>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예상문제 제5회 27번 ㉑>
- ③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서는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동형 제3회 33번 ㉑②>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② 옳음. (동법 제9조 ①)
- ③ 틀림.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5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은 제14조에 규정되어 해당 없음.
- ④ 옳음. (동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2.)

36.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실시한다.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의 내용이 아닌 것은? [20'경간] <예상문제, 동형>

- ① 충성심 ② 성실성 ③ 객관성 ④ 신뢰성

[정답] ③

[해설]

- ③ 틀림.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3조 ①)－객관성x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동형 제5회 37번>
- ②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예상문제 제5회 53번 ㉑>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 ④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예상문제 제5회 55번 ㉑>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①)
- ② 옳음. (동법 제2조 제1호)
- ③ 옳음. (동법 제8조 ①)
- ④ 틀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 결정의 기준 (제9조)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8. 대공상황 발생 시 조치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출동조치 전에 군·보안부대 등 유관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대공상황의 보고와 전파 시에는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보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③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개요를 보고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2보, 3보로 연속하여 보고한다.
- ④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분석판단 및 사건처리에 임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군·보안부대 등 유관기관에 통보는 출동조치와 병행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 ②③④ 옳음.

39.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경간]

-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③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동형 제4회 40번 ㉠>
- ④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경찰학개론】 2020 경찰간부(69기)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① 제9호)
- ②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① 제10호)
- ③ 틀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46조 ① 제13호)
- ④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① 제12의2호)

40.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경간]

- 가.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예상문제 제5회 74번 ②>
- 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상문제 제5회 73번>
- 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하여야 한다.<예상문제 제5회 74번 ④>
- 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공조절차에서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도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가. 옳음.
- 나. 옳음.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 제4호)
- 다. 틀림.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7조)
- 라. 틀림.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 ③)

■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상호주의	외국이 사법공조를 해주는 만큼 자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원칙임
쌍방가벌성의 원칙	형사사법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피요청국과 요청국 모두에서 처벌가능한 범죄여야 한다는 원칙임
특정성의 원칙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피요청국의 증인 등이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두한 경우 피요청국을 출발하기 이전의 행위로 인해 구금, 소추를 비롯한 어떠한 자유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원칙임